

01

2023 군무원 7급

1930년대 굴릭(Gulick)이 제시한 기본행정이론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대 폴란드(Poland)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는?

- ① 기획(Planning)
- ② 조직(Organizing)
- ③ 평가(Evaluating)
- ④ 인사(Staffing)

해설

폴랜드는 굴릭이 제안하여 행정관리자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알려진 POSDCORB에 Evaluation의 첫 문자인 E를 포함시켜 POSDECORB로 만들 것을 제창하였습니다.

정답 ③

02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에서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② 행정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 ③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띤다.
- ④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원리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① (X)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는 행정목표의 개념입니다.
 ②, ③, ④ (O) 행정이념(행정가치)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타입니다. 행정이념은 흔히 행정의 지도원리라고도 불립니다. 행정이념은 국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역사적·문화적 제약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이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03

2023 군무원 7급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무관리란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능률화·경제화하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 ②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가 사무의 작업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③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는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④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균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해설

① (O) 사무관리란 사무작업을 능률화하고 사무비용을 경제화하기 위한 각종 관리활동입니다. 사무관리의 2대 축은 사무작업의 능률화와 사무비용의 경제화이며, 사무작업의 능률화에는 작업능률, 정신능률, 균형능률이 있습니다.
 ② (X)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는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작업능률 X).

정답 ②

※ 사무작업의 능률화

1) 작업능률

- (1) 작업능률이란, 노동을 할 때 인간이 소비한 에너지량과 노동의 결과로 생긴 생산물량 또는 작업량의 비(比)로서 나타내는 노동효율을 말함
- (2) 작업능률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① 작업의 용이화, 작업과정의 간소화·표준화
 - ② 동작의 경제화
 - ③ 사무적인 이동거리(흐름)의 최소화
 - ④ 사무의 자동화·기계화
 - ⑤ 각종 사무집기의 인체공학적 설계

2) 정신능률

- (1) 정신능률은 사무작업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의 최적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신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최소화하여 스트레스(stress)를 가볍게 하여야 함
- (2)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
 - ① 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방법
 - ② 많은 동작이 연속되는 작업과정
 - ③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
 - ④ 조직구성원간의 불화·비협조

3) 균형능률

- (1) 균형능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를 말함
- (2) 균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적재적소에 배치
 - ② 능력에 적합한 사무분담
 - ③ 피로, 과로요인의 제거
 - ④ 공정한 사무관리

04

2023 군무원 7급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의 행동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조직화 →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통제화
- ②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조직화 → 통제화
- ③ 계획화 → 조정화 → 동기화 → 조직화 → 통제화
- ④ 계획화 → 조직화 → 동기화 → 조정화 → 통제화

해설

페이올은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다섯 가지의 관리기능을 제안했는데, 계획, 조직, 지휘(동기화), 조정, 통제입니다.

- 1) 계획: 목표 정의, 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개발, 전략 수립을 포함하는 과정
- 2) 조직: 어떤 과업을 수행할지, 누가 수행할지, 이를 어떻게 편성할지, 누가 누구에게 보고할지, 의사결정은 어디서 맡아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 3) 지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권한위양이 행해지면 명령에 대신하여 동기유발(motivation)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됨
- 4) 조정: 조직구성원과 조직,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 5) 통제: 사전에 계획한 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심각한 차이가 표출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활동

정답 ④

05

2023 군무원 7급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재의 존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
- ②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 ③ 자연독점에 대한 정부 규제
-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해설

- ① (X) 공공재의 존재는 공적 공급으로 대응합니다.
- ②, ④ (X) 외부효과의 발생과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유도, 정부규제로 대응합니다.

정답 ③

06

2023 군무원 7급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 ②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 ③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④ 점증모형의 장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최적모형에서 나타난다.

해설

- ① (O) 합리모형은 합리적 종합모형이라고도 하며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합리모형은 과학주의를 사회현상에 응용한 것으로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설계한 모형에 따라 사회현상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③ (O) 점증모형은 현실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④ (X) Dror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양자에 모두 불신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으로서 최적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답 ④

07

2023 군무원 7급

세일러와 선스타인(Thaler & Sunstein)이 제시한 넛지이론(Nudg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효과가 행동적 시장실패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 ② 넛지란,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 ③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방식으로서 촉매적 정책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해설

- ① (X) 행동적 시장실패론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는 별도로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과정에서 자신에게 귀착되는 내부 효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문제를 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②, ③ (O) 넛지에서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 선택설계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 ④ (O)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답 ①

08

2023 군무원 7급

현행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②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교부세법」 제3조
- ② (O) 「지방교부세법」 제6조
-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O) 「지방교부세법」 제9조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③

09

2023 군무원 7급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만을 세분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 ① (X) 직원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입니다.
- ②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③ (X) 지정할 수 없습니다.
- ④ (X)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정답 ②

10

2023 군무원 7급

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의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서 네 가지 관점에 따른 성과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고객관점: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적법 절차
- ③ 재무적 관점: 자본수익률
- ④ 학습과 성장 관점: 정보시스템 구축

해설

- ① (X)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정답 ①

11

2023 군무원 7급

롤스(J. 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차등 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와 '차등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 ② (O) 저축 원리란 차등의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교육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 ③ (O) 기회 균등의 원리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ex 공무원 시험을 볼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다면 시험 결과에 따른 직위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음)입니다.
- ④ (X) 기회 균등의 원리와 차등 원리가 충돌할 때 기회 균등의 원리가 우선합니다.

정답 ④

12

2023 군무원 7급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④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② (X)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상 편성사유에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답 ②

13

2023 군무원 7급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 ③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④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해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는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재산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5. 주식매수선택권

정답 ②

14

2023 군무원 7급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 ① (O)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 ② (X)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③ (O)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
- ④ (O)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②

15

2023 군무원 7급

사바스(Savas)가 구분한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 ① 시장재
- ② 요금재
- ③ 공유재
- ④ 집합재

해설

비경합성, 비배제성 → 공공재(집합재)

정답 ④

16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 2023년 현재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세의 종류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자동차세
- ㄴ. 부가가치세
- ㄷ. 담배소비세
- ㄹ. 주세
- ㄹ. 개별소비세
- ㅂ. 종합부동산세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종류는 부가주인증(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정답 ③

17

2023 군무원 7급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베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 ③ 재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해설

로그롤링이나 포크베럴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유형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분배)하는 내용을 지닌 분배정책입니다.

- * **규제정책**: '돼지고기를 담는 통'이란 뜻으로, 이권이나 정책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여든 의원들이 마치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에 넣어 절인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 줄 때 모여드는 노예와 같다는 뜻에서 유래 → 특정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사업을 지칭하며, 정치인이나 이익집단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
- * **로그롤링 및 표의 교환행위**: 통나무를 운반할 때 서로 협력하여 굴리는 행위 → 이권이 걸린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위

정답 ①

18

2023 군무원 7급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하나로서,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멘토링(mentoring)
- ② 학습조직
-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해설

조직의 수평적·수직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 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훈련방식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입니다.

정답 ④

19

2023 군무원 7급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리더십이론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행태가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 ② 리더십에 있어 행태론적 접근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 ③ 행태론의 대표적 연구로 리더십 격자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상황의 통합으로 다룬다.
- ④ 리더십 효과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상황론이다.

해설

- ③ (X) 리더십 격자모형은 Blake & Mouton의 연구(관리망)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리더십 스타일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통합적 리더십 모형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 구성원, 그리고 상황 간의 통합적인 맥락구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④ (O) 피들러(F.Fiedler)의 리더십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③

20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 현재 그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것인가?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② 국가경찰위원회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④ 정보공개위원회

해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③

21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에서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 ②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top down)으로 진행된다.
- ③ 사업 검토가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 ④ 상급 관리계층에게 정보홍수와 업무과다를 초래한다.

해설

② (X) 의사결정 단위(예산편성의 기초적인 단위,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편성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향적으로 진행된다. 어떤 조직체가 잘 개발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의사결정 단위는 사업구조의 최저 수준인 사업 요소 또는 활동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면 이 사업을 위한 의사결정 단위는 부서별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④ (O)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도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문서가 요구됩니다. 가령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의사결정 패키지는 11,000개였고, 미국 국방부는 3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답 ②

22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 현재 군인·군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자는?

- ① 공립학교 교원
- ② 소방서장
- ③ 경찰서장
- ④ 검찰청 검찰사무관

해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찰청 검찰사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정답 ④

23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
- ② 직속기관
- ③ 합의제행정기관
- ④ 자문기관

해설

소속 행정기관은 직사출합자(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정답 ①

24

2023 군무원 7급

다음 중에서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킹슬리(D.Kingsley)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 ②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 ③ 정부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된다.

해설

- ② (X)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는 업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O) 능력·자격을 2차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25

2023 군무원 7급

현행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④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

해설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는 「전자정부법」 제4조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닙니다.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정답 ④